올 여름 폭염에 '전력수요' 급등 예비자원·현장점검 전방위 대응

산업부 '전력수급 대책' 발표
이달 전력사용량 95.7GW 기록
작년 여름 '최고치' 육박한 수준
정부, 비상대응·예비력 등 확보
전기요금 완화·취약계층 지원도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가 95.7GW를 기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역대급 이른 무더위로 7월 초부터 전력수요가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7.8기가와트(GW)까지 증가하더라도 8.8GW의 예비력을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태풍, 폭우, 설비고장 등 돌발변수에 대비해 비상 예비자원 8.7GW도 별도로 준비한 상태다.

전력 수요는 이미 '역대급' 기록을 잇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수요가 작년 최고기록(97.1GW, 2024년 8월 20일)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7월 1~7일 평균기온은 28.2℃로, 종전 최고였던 2022년 7월(27.1℃)을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8일 37.8℃를 기록하며 작년 최고기온(36.4℃)을 이미 넘었다.

산업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노후 설비를 사전에 교체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지난해 대비 1.2GW 증가한 106.6GW까지 확보했다.

또 배수시설 보수, 산사태 취약지역 철탑 점검, 노후선로 교체 등 설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업부와 전력유관기관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72일간 전력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시를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감축(DR), 전압 하향조정, 긴급 수요조정 등 4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7,8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체적인 부담을 낮췄다. 기존 1구간(0~200kWh)은 300kWh까지, 2구간(200~400kWh)은 450kWh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4인 가구 7,8월 평균 406키로와트시(kWh) 사용시 기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7월 1일부터 연간 바우처 전액(최대 70만1300원)을 선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2만원까지 확대했다.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가구에 문자, 카카오톡 안내를 보내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폭염 취약현장에 350억 긴급 투입

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소규모 사업장에 냉방장비 지원
농촌 왕진버스·콜센터도 운영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뉴시스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여름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특히,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해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하에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등),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 원)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시원한 물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롯데컬처-메가박스 합병 사전협의 돌입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 심사"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대기업 간 첫 사전협의 사례로 규정하고, 극장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제한 가능성 등 전방위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 사전협의를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영화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 극장과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운영 중이다. 양사는 영화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합병 이후 한 법인은 소멸하고 하나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다만, 어느 쪽이 존속법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국내 극장산업은 현재 1위 CJ CGV와 롯데·메가박스 통합 법인 간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간 CGV가 압도적 1위,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2·3위로 점유율을 나눠 갖는 '1강 2중' 구도였지만, 이번 결합으로 단일 법인이 탄생하면 업계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번 사전협의는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 이후 대기업 간 M&A건으로는 첫 사례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기업이 공정위와 주요 심사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사업주, 변제금 내면 신용제재 유예"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14일~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를 통해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주들에게 안내에 나선다.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들에게 변제금 납입 고지서와 함께 제재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들이 자진납부 기간을 활용해 변제금을 정리하고 신용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쌀 가공식품 일본 수출 확대 추진

도쿄 식품박람회 참가

농협 경제지주가 쌀·쌀가공식품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출장단을 도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10일 농협에 따르면 담당본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은 현지에서 ▲쌀 가격대 ▲한국산 쌀 유통 여부 ▲소비자 반응 등을 파악하고, 일본 외식업체 '이조원'과 농협 쌀 수출 확대방안 및 현지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출장단은 또 9일 도쿄에서 개막한 식품박람회(JFEX)를 찾아 즉석밥, 떡, 디저트 등 일본 내 쌀 가공식품 소비동향 파악에도 나섰다. JFEX는 일본 농림수산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가 후원하는 B2B 박람회로, 올해 행사에는 식품회사 700여 곳의 참석이 예정돼 있고 2만 5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대 일본시장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해 쌀·쌀 가공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일 품목지원본부장은 "전통적인 쌀 소비국인 일본에서 간편식, 소용량 등의 식품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국산 쌀·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